금남로에서

김 재 열

市·郡 통합보다 더 시급한 것

전국 곳곳에서 짝짓기 논의가 한창이다. 인접한 시나 군을 합쳐 큰 도시로 만들기 위한 행정구역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자치단체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뒤 통합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에는 파격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당근도 제시됐다.

전국 곳곳에서 불협화음

그러나 이에 따른 불협화음도 끊이지 않고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상대 시군의 뜻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반발을 사는가 하면, 한 지역에서도 첨예한 찬반 대립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찬성과 반대 주민 간 주먹다짐 사건도 벌어졌다.

이 같은 부작용에도 정부가 막대한 국고를 지원해가며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의 효율성 증대다. 중복된 행정구조에 따른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을 없애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행정구역 통합은 나름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전남 동부지역처럼 한 기업체를 놓고 2~3개의 자치단체가 제각기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생활권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치면 시·군청사, 문화체육시설 등을 여러 곳에 따로 지을 필요도 없어진다. 시대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에 계속 매달릴 이유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보면 설사 행정구역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지방 경쟁력이 강화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졸속 추진이나 광역시와 도 기능 약화로 중앙집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논란은 예외로 치자. 최근 수도권규제가 하나 둘 씩 풀리면서 국토균형개발은 과거 정권의 유물로 전락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44명은 한걸음 더 나아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아예 대놓고 수도권 규제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으로 촉발된 세종시 논란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에까지 효율성 시비가 번지지 않을까 염려해서다.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도 이전대상 기관이 부지매입을 미루거나 최근 일부 기관이 나주 이전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발언도 예사롭지 않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투자 증대 못지 않게 과밀화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지난 한해 수도권 교통혼잡비용만 12조원에 달했다. 수도권 비대화로 사회간접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커질수록 지방에 투자해야 할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지방의 숨통을 조이고 국토균형발전의 기조를 뿌리째 흔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몸집만 키운들 경쟁력이 살아나겠는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고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돈과 권력을 지방에 나눠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소통의 출발점은 신뢰

현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것이 소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2기 국정쇄신을 다짐하면서 서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신임 대표 역시 취임 첫 방문지로 광주를 찾아 양동시장에서 바닥 여론을 청취했다.

소통이 잘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자는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양식과 군대, 신뢰 가운데 끝까지 지켜야 할 항목으로 신뢰를 꼽았다.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나 차질없는 세종시 조성은 현 정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다. 시장에서 떡볶이나 어묵을 사먹으며 현장 민심을 체감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의 일관된 집행이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 〈논설위원〉

사 설

당국 방관속에 초토화된 지역 골목상권

대형마트 진출로 광주지역 골목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다. 거대한 자금력과 현대적 마케팅·물류관리기법을 앞세운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진입으로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골목상권이 존립기반마저 잃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광산구에 롯데아울렛·롯데마트 수완점이 오는 24일 문을 연다고 한다. 이에 따라 광주는 백화점 3개, 대형마트 12개, SSM(기업형 슈퍼마켓) 20여개 등 가히 '대형 유통점 천국'이라 할 만하다. 인구 4만명 당 대형유통점 1개꼴이다.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의 목을 옥죄는 형국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폐해는 심각하다. 대형마트 면적이 1% 증가함에 따라 중소유통의 시장점유율은 약 0.19%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 80~90%가 역외로 유출되며, 주변상권의 몰락으로 인해 지역평균 물가가 상승하고, 중소유통 종사자의 실업이 대형소매점 고용창출보다 평균 1.8배가 높다고 한다. 그렇다고 대형마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활동을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 광주시, 중기청, 중기중앙회 등 관계 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이 나라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다.

지역상권의 붕괴는 분배구조의 왜곡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빈곤층 확대와 실업 문제를 일으킨다. 구조적 측면과 마케팅, 경영관리 등 보다 효과적인 지원 전략이 절실한 것이다.

제도적인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이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제로 전환하든지, 입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출점, 영업시간, 품목 제한 등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조치도 급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서민경제 회복'을 외친다면 소규모 지방 상권을 살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단속만으론 성매매 근절 한계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이 23일로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지난 5년 동안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법 시행 이후 집단 성매매 업소가 단속의 철퇴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성매매가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사범의 수는 특별법 시행 첫해인 2004년 1만6천947명에서 지난해 5만1천57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된 탓도 있겠으나 아직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불리는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사지 휴게텔과 안마시술소, 인터넷 성매매 등은 오히려 성행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성매매 수요가 넘쳐 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특별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법 집행과 단속의 강도를 높이는 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능화된 성매매 수법을 제도나 사법기관의 단속이 따라잡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무엇보다 성(性)이 돈을 주고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남녀 간에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나 가정에서 성교육과 도덕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함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쉽게 불법 음란물에 접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가 난립해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어린 학생들이 불법 음란물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성매매 범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강 대 석

생물산업에 미래 있다

요즈음 기온이 내려가면서 신종플루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다행히 녹십자 화순공장에서 개발한 신종플루 백신이 임상실험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남으로서 다음 달부터는 예방접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녹십자 화순공장은 지난 7월 준공이후 그야말로 대박을 맞고 있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연일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주식은 연초대비 두 배나 뛰었다.

이렇듯 국내 최초의 신종플루 백신생산업체가 된 녹십자가 화순에 공장을 세우게 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005년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30년 주기로 대유행하는 독감에 대비하고자 실시한 백신개발 공모사업에 전남도와 녹십자가 공동연구 파트너로 손을 잡으면서부터였다. 그때 사실 전남도가 제출한 화순생물의약연구센터와 녹십자의 백신공동개발 제안서는 입지 여건과 연구 인프라 측면 등에서 수도권에 밀려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전남도와 녹십자의 끈질긴 설득 끝에 백신개발 프로젝트를 따내는데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화순공장이 들어서고 마침내 신종플루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생물산업은 신종플루 백신개발사업과 같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생물의약 분야를 비롯하여 나노 바이오, 해양바이오, 식품산업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전남도는 그동안 생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의 13개 생물산업 특화 센터 중에 전남도에만 7개가 들어선 것만으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생물산업진흥재단 산하에는 나주의 식품산업연구센터, 화순의 생물의약연구센터, 장성의 나노바이오연구센터, 곡성의 생물방제센터, 장흥의 천연자원연구원과 한방산업진흥원, 완도에 해양바이오산업센터가 들어서 있다. 이들 특화센터에서는 녹색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장비, 시설 임대는 물론 관련 연구를 분야별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 전남지역은 생물 산업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의 인증면적과 생산량이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산과 들 그리고 바다에는 수많은 생물자원이 지천으로 널려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하나하나 연구하여 거기에 담겨져 있는 기능성 물질과 약리성분 등을 규명하여, 신약이나 바이오 관련 제품으로 개발한다면 굴뚝산업에 있어서는 뒤졌지만 녹색산업시대에 있어서는 당연히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의 흐름은 지난 50여 년간 지속된 정보통신시대를 바탕으로 이제 생명공학 바이오(생물) 산업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화석 연료의 고갈이 멀지 않은 지구환경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는 생물 산업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생물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육성할 때 그 속에서 인류의 미래는 보장될 것이다.

〈전남 생물산업진흥재단 행정지원실장·시인〉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김 동 화

영산강 살리기에 대한 제언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산강'을 치면 길이 165.5km, 유역면적 3371㎢이며, 담양군 용면 용추봉에서 발원해 담양, 나주, 영암, 함평, 무안을 지나 영산강 하구둑을 통과, 황해로 흘러든다라는 글로 설명이 시작된다.

영산강은 호남을 관통하는 우리의 고동치는 심장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영산강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산강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오폐수로 인해 오염되고 퇴적토가 높이 쌓여 본래의 강 기능을 상당부분 잃은지 오래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영산강을 살리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재직 시절 2006년부터 도지사를 중심으로 영산강 프로젝트를 구상해 정부에 뱃길복원을 꾸준히 건의해왔던 때를 상기하면서 사업이 성공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여기서 영산강살리기 용역 설계시 반영되어야할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집중 호우시 영산강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

영산강은 제방 축조 당시 바닥을 파서 하천을 만든게 아니라 애초의 지반위에 그대로 만들어져 인근지반과 하천의 바닥 높이가 별 차이가 없고 1920년 전후 제방 축조 이후 퇴적토 준설을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아 비가 많이 내리면 수위가 높아져서 범람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수심 6m 이상이 되도록 준설해 하천의 범람을 미리 막고 수량도 확보해 하천수 정화기능 제고는 물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크게 기여토록 해야 한다.

둘째, 영산강 주변 저지대에 대한 대책을 함께 세워야한다. 영산강은 집중호우시 배수펌프시설이 부족해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반복된다. 또 기존 배수펌프장도 용량 부족으로 올해 폭우시 구진포, 부덕동, 금천 오강리 등 많은 곳에서 침수 피해가 컸던 것을 감안해 영산강 주변 저지대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셋째, 영산강하구에서 영산포까지 이르는 구간에 죽산보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1970년대 중반까지 영산포까지 홍어, 젓갈을 실은 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항구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뱃길을 복원하려면 강 중간에 인공장애물인 보가 없어야 한다. 첫 번째 제언처럼 수심 6m를 유지하면 이 문제도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

넷째, 영산교 부근 하천폭을 확장해야 한다. 영산교를 중심으로 상류 측인 나주교 부근은 하천폭이 900m 이상인데 비해 하류 측인 영산교 부근은 650m 정도로 하천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항상 홍수피해의 위험을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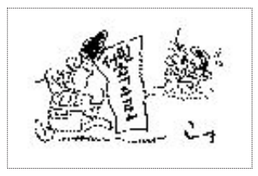
지난 태풍 메기 때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올 여름 태풍 모라꽃이 오기 직전 폭우시에도 위험했다. 하천폭이 좁으면 둑을 높이 쌓아서 소요단면을 유지해야 하지만 하천폭을 넓히면 그만큼 홍수량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창부근에 둑을 쌓지 않아도 된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훗날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이 우리의 희망이자 훌륭한 자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전 전남도 건설재난 관리국장〉

無 等 鼓

빈부의 대물림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 구성원의 20%에 불과한 이른바 '고소득층'과 8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간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있어 아찔한 느낌까지 든다. 이러다간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하지나 않을까 모골이 송연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초 고소득층의 학원비 지출액은 저소득층에 비해 8배에 달했다. 서적 지출비나 자동차 구입비, 장신구 지출비 등도 얼마간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식비외에 교육이나 문화생활 관련비용을 늘리는 저소득층은 거의 없다. 반면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면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소비를 늘릴 여력이 더 커진다. 임금수준이 높고 일자리도 안정적인 데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자산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문화·미용 등 자기계발이나 관리에 대한 소비는 단순히 소모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잠재적인 투자로 작용한다. 곧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교육·운동·치장 등에 대한 지출규모의 차이는 지능·건강·외모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급기야 '우성 인간'과 '열성 인간'을 구분하는 잣대가 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 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나면 공부도 잘하고 멋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구문이 된지 오래다.

소득의 불평등은 어느 국가든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불평등에 따른 위화감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아쉽게도 현 정부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듯하다.

4대강 프로젝트에서 중소건설사들을 원천봉쇄한 조치나 고소득층을 향한 조세정책, 영세농 코너로 몰기 등을 보노라면 빈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뿐이다. 요즘 '서민 속으로' 달려간다는 정부의 구호가 왜 그리 공허하게 들리는지.

/이종태 사회2부장 jtlee@kwangju.co.kr

화재현장 후유증 시달리는 소방관 건강대책 필요

지금까지 사망한 퇴직 소방관들의 사인은 절반 이상이 암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다. 소방관들의 암 사망률은 일반인들의 20배나 된다. 화재 현장서 발생하는 각종 연기와 유독가스는 소방관들의 건강과 직결된다. 작년에 남편과 사별한 한 소방관 아내는 화재현장을 누비던 남편이 퇴직 한 달을 앞두고 폐렴증세를 보이다 끝내는 폐암으로 58세의 나이에 생을 마쳐 주위 동료의 눈시울을 적셨던 적도 있다.

퇴직했거나 재직중인 소방관중 60대 중반을 전후해 세상을 떠난 사람은 국내 60대 일반인 남자 사망률 1.5%의 15배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 또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인이 암이라는 사실이다. 암 중에서도 간암과 폐암이 전체의 86%로 압도적이다. 생존해 있는 퇴직 소방관 가운데서도 43%가 뇌졸중과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소방관 재직중 늘 이런 위험에 시달리므로 더욱 충분한 질병예방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장영환·광주시 동구 충장로2가

휴대폰 게임 즐기는 아이들 시력저하 주의해야

안과에서 아이들 눈이 나빠진 이유가 휴대전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혹시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휴대폰을 사주실 생각이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꼭 참고해주길 바란다.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던 모양이다. 휴대폰의 작은 액정화면 속의 움직이는 화면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근시가 생기고 각종 안과질환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도, 사람들로 붐비는 학원 버스 안에서도 계속해서 휴대전화에 매달린 결과 시력을 뺏긴 듯했다. 집에서는 까맣게 몰랐고 손가락을 바삐 움직이며 휴대전화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시력은 나날이 나빠져 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작은 액정을 보며 오랫동안 게임을 즐긴 뒤 오는 피곤함이었다. 특히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 버스에서 휴대전화 화면의 흔들림이 심한 경우엔 눈의 피로도는 더욱 가중된다고 한다.

안과 의사선생님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오래 하면 수정체가 튀어나오고, 심해지면서 근시가 되고 정상을 회복하는데 한참이 걸린다고 한다. 작은 액정화면에 시선을 집중한 탓에 눈의 초점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자녀의 소중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선희·목포시 눌도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